

## 미란다원칙 (미란다 경고, 미란다 고지, 묵비권, 진술거부권)

### (1) 의미

-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에서 유래한다.

### (2) 핵심 내용

-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심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
-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자백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자백을 유도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3) 미란다원칙 관련 추가 내용

- 미란다 고지 전 자발적인 자백의 경우. 진술에 있어서도 미란다 경고 없이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자백을 하고, 다시 1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미란다 경고를 받은 후 상세한 자백을 한 경우에도 뒤의 자백은 앞의 자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독수의 과실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미국(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미란다원칙에 추가하여,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심문 이전에 자국의 영사관에 접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지함.

### (4) 한국의 상황

(가) 한국의 경우,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

(나)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다) 섬영,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진술거부권 인정되지만, 민사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의 경찰청에서는 미란다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고지하고 있음.

- ① 체포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
- ② 변호인 조력권(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
- ③ 진술거부권(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마)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미란다원칙(묵비권)을 고지하는 3가지 단계

- ① 경찰 혹은 검찰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 ② 경찰 혹은 검찰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
- ③ 재판에서 피고인의 인정 심문 전

#### (5) 진술거부권의 의의

-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혹은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은 단순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응하게 취급되는 것임.
- 통상 수사를 진행할 때 작성되는 서류로, 피의자임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는 서류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고, 단순 참고인 지위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가 있음. 최근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함.

#### (6) 진술거부권 관련 법률 조항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4.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③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④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외국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정답 2)

대판 도 2011.11.10, 2010 829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아니라 일체의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 제 조 의, ( 244 3).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144 1 1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12 2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대리인 제 조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외국인에게도 인정 됨은 물론이다.

-----

진술거부권의 법적 의미
--------------

□ 의미

-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묵비권(?秘權, right to silence)이라고도 함. 이런 진술거부권은 영미의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서 유래함.
- 피고인에게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없게 됨에 따라 검사와의 관계에서 당사자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함.

## □ 주요 내용

### ○ 진술거부권의 주체 :

-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직 피의자의 지위가 되지 않은 피내사자나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되고,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음.

### ○ 진술거부권의 범위 :

- 진술의 의미와 한계 :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陳述)이다. 진술이란 언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함.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함.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음.
- 거짓말탐지기(polygraph)에 의한 검사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질문에 대한 대응관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검사결과는 넓은 의미의 진술에 속한다고 봄.

### ○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

- 헌법에서는 형사상 자기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이며 민사책임이나 행정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음. 그렇지만 형사책임과 관련된다면 범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발견에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 등에서 행하여진 진술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 ○ 고지의 방법과 내용

-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해야 함.
-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

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 동일한 수사기관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는 신문할 때마다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시되거나 조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해야 함.

#### □ 진술거부권의 효과

- 증거능력의 부정 :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최소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함.
- 불이익추정의 금지 :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증거인멸 자료로의 인정 여부 :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구속사유 또는 필요적보석의 제외사유로서의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구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였다면 당연히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진술거부권 행사를 통해 거부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증거인멸 염려의 판단은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양형상 고려의 여부 : 판례는 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양형상 불이익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음.